

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

2021. 7. 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현황 및 문제점	1
II. 추진전략	2
III. 세부 추진과제	3
IV. 과제별 추진일정	14

I. 현황 및 문제점

□ 인구감소 위기 등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

- **(저출산·고령화 심화)** 저출산·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* (15~64세)는 '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시작, '20년 데드크로스 발생**
 - * 생산연령인구(만명) : ('10) 3,621 → ('18) 3,765 → ('20) 3,736 → ('40) 2,703
 - ** 인구 데드크로스 : '20년 출생자 < 사망자
- **(체류외국인 증가)** 체류외국인은 '07년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,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하지만 향후 증가* 예상
 - * 체류외국인 수(만명) : ('17) 218 → ('18) 236 → ('19) 252 → ('20.9.) 210
- **(전문인력 유치 정제)** 비자제도 개편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, 전문인력은 취업자격* 외국인의 약 9.6%인 4.3만명으로 정제**상태
 - * '20년 취업자격 외국인 수(45.2만명) : 전문인력(4.3만명), 단순노무인력(40.9만명)
 - ** 전문인력 추이(만명) : ('15) 4.9→('16) 4.8→('17) 4.7→('18) 4.7→('19) 4.7→('20.) 4.3
- **(신규입국 감소)**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대규모 신규입국은 어려울 전망,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활용요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적시 공급 곤란

□ 외국인정책반 경과

- '21.2.5. 운영계획 및 작업반·과제별 추진계획 확정(Kick off 회의)
 - TF 산하 분야별 작업반(8개) 중 '인구감소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' 논의를 위해 외국인정책반* 구성
 - * (참여부처) 법무부(주관), 기재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
 - 2월부터 작업반 회의(2회) 및 서면회의(4회)를 통해 부처 간 의견 조정

II. 추진전략

□ 외국인정책 활용 방향

- 출생률 제고정책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**체류외국인 활용** 등 **보충적 외국인 정책 추진**
-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인력부족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**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주환경 개선 마련**
- 이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, **정부 지원시책의 합리화와 이민자의 공적의무를 조화롭게 정책 추진**

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숙련기능인력제도 확대▶ 단순노무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체계 마련▶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
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·지원	유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우수 인재 유치체계 개편▶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
	정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유학생 국내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▶ 사회복지 분야 보충적 외국인 활용체계 마련
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▶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
재외동포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입 확대 추진▶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
경제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	

Ⅲ. 세부 추진과제

1.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

□ 숙련기능인력(E-7-4) 제도 확대

- **[중기]**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*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'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*' 연간 쿼터 확대 추진

*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, 기술 숙련도,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,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'숙련기능인력(E-7-4)' 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

- 대상 외국인 체류규모*와 숙련기능인력 수요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쿼터를 확대하여 신규인력 채용비용 절감, 산업기술 축적 도모

* 점수제 대상 체류인원(E-9, E-10) 대비 쿼터 비율은 '18년 0.20%, '19년 0.24%, '20년 0.39% 수준임

□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

- **[단기]**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국가 및 규모(연 주 600명) 단계적 확대('21.상)
- **[단기]** 체류·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(E-9, H-2) 대상 농·어업 계절근로 한시 허용

* '22.3월까지 농·어업 계절근로 취업 가능(1회 근무기간 1개월~5개월)

- **[단기]** 체류·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대상 체류·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('21.4월~)

* (대상) '21.4.13~12.31. 기간 내 체류·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(E-9, H-2)

□ 외국인 근로자(E9)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

- **[중기]**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('21.상)

-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적용

* (現)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뒤 지역가입 적용 → (改)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적용

□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- **[중기]** 여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* 대상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, 지원물량 등 확대

* '21년 여성 외국인근로자(E-9)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(10개~600개소, 개소당 15백만원)

- **[중기]** 영세 농·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
- **[중기]**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

□ 특례 고용허가제(H-2) 허용업종 결정방식 네거티브 전환

- **[단기]** H-2 허용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을 결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
- H-2 네거티브 전환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('21.12월)

□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

- **[중기]** (연근해) 어선원 도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국 공공기관을 통해 선발하는 MOU 체결 추진

- 최대 송출국인 인도네시아와 어선원 도입체계 및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('21.5월)

- **[단기]** (원양) 현 송출·입 구조는 유지하되, 불법행위 송출업체 적발 시 국내선사와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·감독 강화

- 임금수준, 휴식시간 보장 등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('21.1~), 각종 수수료는 모두 선사가 부담토록 추진

2.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·지원

[유치 분야]

□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

○ 취업 체류자격 유연성 강화

- [중기] 국가차원 육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망산업 분야(관계부처와 협의) 우수인재의 체류요건 완화*, 거주(F-2)자격 허용 등 정착유도

* (예)일정 수준의 소득요건 충족 시 학력·경력요건 면제(재학생, 중퇴자 등도 가능)

- [중기] 고소득자, 유망산업분야인 경우에는 사전에 허용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허용하는 '네거티브 방식'* 혼용

* 사행산업 등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, 단순노무직·일반사무직 등은 제외

- [중기] 고소득자 고용업체, 유망산업분야·경제자유구역·지역특구 소재 업체 등의 경우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기준 우대

○ 체류자격 관리체계 정비

- [중기] 1인당 국민소득, 동종업계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취업 체류자격 직종별 소득기준 상향 조정

※ 국민 대비 저임금 지급, 최저임금 고착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및 국민 일자리 잠식 방지

- [중기] 종사 직종·업종, 개인의 사회통합 노력, 납세실적·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부여

□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비자 신설

- [중기]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·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원격근무자(telecommuter) 비자 신설

* (에스토니아 Digital Nomad Visa) 최근 6개월간 월소득 3,504€(약 470만원) 이상의 원격근무자(고용/프리랜서)의 장단기 체류 지원, EU내 합법체류 가능

- 관계 중앙부처,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*을 제공하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유도

* 관광정보 제공, 종사분야별 거주지 추천, 원격근무지 제공, 동종업계 협업·취업 지원, △자녀 진학상담, △배우자 취업지원 등

□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

- [중기] 각 지역별 지역특화산업, 대학·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'지역특화형' 비자 시범사업 추진

- 한국어능력 등 기본요건과 지역별 특별요건*을 모두 갖춘 외국인에게 '거주(F-2)'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여 지역 내 정착 장려

* 지역특화사업 관련 전공자, 지역소재업체 취업자, 지역대학 졸업자, 지역 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, 시·도 지자체장의 추천 등

□ 우수인재 대상 한국어 학습기회 지원

- [중기] 세종학당 지정·운영 지원 확대,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 파견 및 양성,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·교재 지원 및 현지어-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제공 등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

- [중기] 지자체·관계부처·기관 협업 '국내 세종학당'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정·교재·교원 지원 및 '한국어 교재 인증제(가칭)' 운영

-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어 교재 인증제 도입 등 추진

- [중기] 82개국 234개소('21년)* 세종학당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비대면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·지원

* '21년 18개국 26개소 신규지정 완료('21.6월)

- '세종학당재단 숙달도 평가' 시범운영 및 동 시험의 비자 취득요건 인정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진행

□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

- [단기] 해외 석학 및 우수인력 파악을 위한 「글로벌우수인재지도」 작성

-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및 전략적 국제협력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외 연구자 및 연구기관 파악 필요

- **[단기]** 해외 석학과의 자문·협력 및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「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(BrainLink)」 추진

□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

- **[단기]**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소,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
 - 신흥국 해외마케팅, 적정임금 기술인재 유치 등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
- **[단기]**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을 통해 전문인력 발굴, 이력 확인, 면접 주선(화상상담 등), 채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

□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친한·지한 인재 양성

- **[중기]** 한국어 수요가 있는 모든 국가의 정규 초·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·운영 지원
 - * (20년) 39개국 1,669개교 → (21년) 43개국 1,800개교
- **[단기]**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채택에 활용 가능한 「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」 개발·제시('20.9.~'21.4.) 및 이에 기반한 범용교재 개발
- **[단기]** 원어민 한국어 교원(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이상) 파견, 현지 교원 연수 및 현지 대학 내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지원
- **[중기]** 말하기평가 시범운영('22년), 인터넷 기반시험(IBT) 전면 시행('23년)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 확대

* (21.상) IBT 시스템 개발 추진 ⇒ (21.하) 말하기평가 시범운영(2회) ⇒ (22.) 말하기평가 정규시행 ⇒ (23.) IBT 전면 시행

[정착지원 분야]

□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

- 유학생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유도
 - **[중기]** 영주·귀화 및 체류요건 우대, 한국어능력 향상을 원하는 유학생을 위해 유학생 유치대학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
 - **[중기]** 지역봉사·행정지원 활동 우수자, 한국어능력·학점 우수자 등의 국내체류 요건을 우대*하여 유학생의 사회통합 노력 장려
 - * (예) 구직(D-10), 점수제 거주(F-2-7) 등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체류자격 요건 우대
 - **[중기]** 졸업 후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, 전공분야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*
 - * (예) 석·박사 유학생의 유망산업분야 취업허용 직종 확대, 전문학사 유학생의 숙련 기능인력 분야 취업허용 검토 등
- 유학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
 - **[중기]** '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및 질 관리' 근거를 관련 법률에 두어, 유학정책의 추진동력 확보
 - **[중기]** 유학생의 입학·체류·진학·취업 등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·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전문성 강화

□ 인력부족 예상분야 외국인 활용체계 중장기 검토

- **[중기]**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사전 검토
 - 가사·육아·간병 분야 종사 외국인의 체류자격, 범죄경력 등을 사전 검증하는 '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' 병행 추진
 - ※ 가사·육아도우미, 간병인, 산후조리원, 요양보호사 직종 대상

3.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

□ 이민국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

- **[중기]**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이 증가하는 **이주 단계별 사회보장 서비스 검토**

※ 단기체류자 ⇨ 비영구 장기체류자격(유학생 등) ⇨ 준영구 체류자격(전문인력 등)
⇨ 영주권자 등 체류 상 지위 순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

- ‘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연구’ 연구용역 추진(‘21)

□ 영주자·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

- **[중기]**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해 **영주·귀화 허가자를 대상으로**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, 필수 생활 정보 제공 등 **오리엔테이션 교육 방안 마련**
- 맞춤 교육 제공을 위한 교재개발 및 커리큘럼 구성 등 교육 내실화 방안 검토

□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

- **[중기]** 체류 외국인들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
-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(‘22.상)
-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를 금융기관에 회신해 주는 ‘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’ 구축 (‘23.하)

□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및 평가

- **[중기]**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질적

평가체계를 통한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**한국형 이민통합 정책 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**

-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관련 연구용역 추진(‘21년)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통합정책지수 측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

- **[중기]**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인정책교육을 법무부·행안부가 공동 주관하고 타 부처에서도 참여하는 **합동교육으로 전환**
- * **(현행)** 법무부는 17개 ‘광역’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, 1박 2일 워크숍 방식으로 외국인정책 교육 진행
- 6개 권역(서울·인천권, 경기권, 강원권, 충청권, 경상권, 전라권)으로 나누어, 지자체 공무원에게 연 1회 교육 실시 ⇨ 향후 연2회 확대 검토

□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

- **[중기]** 다문화·다인종이 공존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**다문화 인식개선 추진**
- 정부간행물, 교육자료 등 대상 다문화·인종 차별 요소 점검 컨설팅 지원
-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종사자, 다문화 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콘텐츠 제작
- **[중기]** 다문화가족 자녀 등 중도입국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추진
-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(25개소)을 목적별 3가지 유형*으로 세분화하여 정착단계별 지원 강화
- * ①한국어특화형(한국어교육 중심 생활적응 과정), ②진학준비형(편입학 준비 및 검정고시 등 정착지원 과정), ③진로특화형(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)
- 상담통역지원사 양성·지원 및 심리사회적응척도를 개발·보급하여 진로와 심리진단 등 지원
- * (‘20) 심리적도 개발(한국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) → (‘21) 시범적용 및 매뉴얼 제작 → (‘22)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보급

□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

- **[단기]**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주민과 소통·교류할 수 있는 공간 등 조성·확충 지원(21.상)
 - *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 소통교류공간, 풋살장·쉼터 등 문화편의시설, 지원센터 확충 등
- **[단기]** 지역 내 외국인·지역주민 간 상호문화 존중 분위기 조성(21.하)
 - 문화·체육활동을 통한 외국인·지역주민과 소통·교류 기회 제공
 - 외국인 등 다양한 소수문화 주체와 지역주민 간 문화·예술을 통한 소통·교류 활성화 지원('12~, 계속)
- **[단기]** 외국인주민 관련 지자체 시책 수립 지원(21.하)
 -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해 사례집 제작·배포
 - 관련 표준조례안 개정,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발표 등

□ 사회통합교육 강화

- **[중기]** 세계평화, 인권,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**세계시민교육***을 학교 현장에 정착
 - * 2015 세계교육포럼 「인천선언문」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을 계기로 한국이 적극 지원하는 의제
- **[중기]** 세계시민교육 확산
 - 선도교사 선발(매년 600여명), 연수 및 교사연구회(17개 시·도 교육청) 지원
 - 세계시민교육 원격교육 강좌 개발·보급
 -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-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('21.11월 예정)

□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

- **[중기]**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·외국인 학생 등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**한국어학급*** 확대 설치
 - * ('18) 223학급 → ('19) 326학급 → ('20) 372학급
 -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'찾아가는 한국어교육' 운영
- **[단기]**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**한국어교육 원격 콘텐츠 및 학습자료*** 제작·보급(21.상)
 - * 한국어 보정(21차시), 일상 어휘(10차시), KSL 영상콘텐츠('20)222차시→('21)96차시
 -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다문화교육 영상 콘텐츠(10~15분 내외) 제작·보급(21.하)

4. 재외동포 정책

□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치 추진

- **[중기]**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·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(F4) 자격 부여

□ 한국어학습 지원을 통한 정체성 함양

- **[단기]** 부처·기관 협업을 통해 한글·한국문화 등 **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**
 - △한국어 학습 교재 보급 확대 △기관 협업 한국어·한국문화 전문강좌 운영 및 비대면 교육 지원 확대* △교원 재교육·연수 지원
 - * 재외동포재단 협업 온라인 세종학당 이클래스(E-CLASS) 구축 예정(일어, 러시아어)
- **[중기]** 신북방지역 세종학당(13개국 37개소, '20년) 지정 및 교원 파견·양성 확대 등 해당 지역 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지원
 - 매년 초 전 세계 재외공관 한국어 확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재외동포

대상 교재(『전 세계 유아를 위한 신나는 한국어』 등) 보급 계속

□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

- **[중기]** 한국교육원의 체계적 운영 확대, 한국교육원 강좌 내실화 등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
 - 신북방지역 한국교육원 적용 공통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수정·보완 추진('21.3.~9.)
 - 전 한국교육원 대상 한국어강좌의 운영기준 및 수료증 전자 발급을 순차적으로 확대·적용('21.5~12)
 - 중점·거점 한국교육원 중심으로 한국교육원 운영의 체계화 추진
 - * 미주유럽·아시아 지역 등 거점 한국교육원 4개원 지정('21.4.), 신남방·신북방 지역 중점 한국교육원 4개원 지정 운영('20.5~)
 - 한국어, 한국문화 등 강좌의 공통 교육과정 및 운영기준 적용 확대, 재외동포 자녀를 위해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강화
- **[단기]** 한국교육원 평생교육 강좌 수료증 전자 발급의 전 교육원으로 순차적 확대로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체계화('21.5~12)
- **[단기]**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의 비자 취득* 요건 인정 확대
 - * 재외동포(F-4), 방문취업(H-2), 결혼이민(F-6)

IV. 과제별 추진일정

주요과제	담당부처	추진시기
1. 다양한 인력활용 방식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		
□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		
▶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연간 쿼터 확대 추진	법무부	'22.下
□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		
▶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국가 및 규모 단계적 확대	고용부	'21.上
▶ 출국기한 유예 외국인(E-9, H-2) 농·어업 계절근로 한시 허용	법무부	'21.上
▶ 기간 만료 외국인(E-9, H-2) 체류·취업활동 1년 연장	고용부	'21.上
□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강화		
▶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	고용부복지부 농식품부해수부	'22.下
□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		
▶ 여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	농식품부	'22.下
▶ 영세 농·어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임차료 지원	고용부	'22.上
▶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	농식품부	'22.下
□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 변경		
▶ 방문취업(H-2) 허용업종 결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	고용부	'21.下
□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		
▶ (연근해)외국인 어선원 도입 시 공공기관을 통한 선발 추진	해수부	'21.上
▶ (원양) 송출업체 불법행위 시 계약해지 유도 등 관리·감독 강화	해수부	'21.下
2.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·지원		
□ 우수인재 유치체계 개편		
▶ 고소득자·유망산업분야 취업 허용 시 네거티브 방식 혼용 등 취업 체류자격의 유연성 강화	법무부	'22.下
▶ 취업 체류자격의 소득기준 조정 및 취업사업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 내실화	법무부	'22.下
□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비자 신설		
▶ 원격근무 우수인재 장기체류 체류자격 신설	법무부	'22.下
□ 지역특화형 장기 체류비자 도입		

▶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, 주민확보 정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신설	법무부	'22.下
□ 우수인재 대상 한국어 학습기회 지원		
▶세종학당 지정·운영 지원 확대 등 해외 한국어 학습기회 증대	문체부	'22.上
▶'국내 세종학당'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및 '한국어 교재 인증제' 도입	문체부	'22.上
▶세종학당을 통해 비자 발급 요건 충족 기회 확대	문체부	'21.下
□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		
▶해외 석학 및 우수인력 파악을 위한 「글로벌우수인재지도」 작성	과기부	'21.下
▶해외 석학의 국내 유치를 위한 「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(Bank)」 추진	과기부	'22.上
□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		
▶국내기업연구소 등 수요 맞춤형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	산업부	'21.下
▶전문인력 발굴에서 채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	산업부	'21.下
□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		
▶한국어 수요 국가의 정규학교에 한국어반 개설·운영 지원	교육부	'21.上
▶해외 초·중등학교용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	교육부	'21.上
▶한국어 교원 파견 및 현지 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	교육부	'21.下
▶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평가 시범운영, 인터넷 기반 시험 (IBT) 전면 시행 등 한국어교육 인프라 확충	교육부	'23.上
□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및 관리체계 정비		
▶유학생 개인의 사회통합 노력을 우대하고 학점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지원	법무부	'22.下
▶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및 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학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	교육부 법무부	'22.下
□ 사회복지 분야 보충적 외국인 활용체계 구축		
▶자격을 갖춘 체류외국인을 취업과 연계하는 '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' 구축	법무부	'22.下
3.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		
□ 외국인 사회보장체계 개선방안 검토		
▶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	법무부	'22.下
□ 영주자·귀화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추진		
▶영주·귀화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등 맞춤형 교육 제공	법무부	'22.下

□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		
▶원활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진위 확인시스템 구축	법무부	'23.下
□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		
▶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	법무부	'22.下
□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		
▶연 2회, 권역별로 부처 합동 외국인정책 교육 실시	법무부	'22.下
□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		
▶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추진	여가부	'21.下
▶레인보우 스쿨을 통한 정착단계별 지원,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등 중도입국 아동·청소년 체계적 지원 강화	여가부	'21.下
□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		
▶외국인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 지원	행안부	'21.上
▶문화·체육·예술 활동을 통한 상호문화 존중 분위기 조성	행안부 문체부	'21.下
▶외국인주민 관련 지자체 시책 수립 지원	행안부	'21.下
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교육 강화		
▶'세계시민교육' 학교현장 정착 및 확산 기반 강화	교육부	'21.下
□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		
▶중도입국 학생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및 원격콘텐츠 제작·보급	교육부	'21.下
4. 재외동포 정책		
□ 우수인재 유치 확대		
▶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 자격 (F-4) 부여	법무부	'22.下
□ 한인정체성 함양교육 강화		
▶부처·기관 협업을 통해 한글·한국문화 등 교육 강화	문체부	'21.下
□ 재외동포 평생교육 지원		
▶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	교육부	'21.下